

# 인권교육: 차별금지와 평등

2015년 7월 22일(수)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주영 박사

jooyounglee@snu.ac.kr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다.**

# 근대 보편인권 사상과 평등의 원칙

- 근대 보편인권 사상 이전: 차별 = 정상  
남녀, 반상, 카스트, 종교, 노예...
- 근대 보편인권 사상 이후: 차별 = 사실상 관행  
백인종 v. 유색인종  
남성 v. 여성  
유산계층 v. 무산계층  
식민지배층 v. 피지배층 등등

# 20세기 차별의 참혹한 결과

- 일제의 조선인 차별 (1905~1945)

창씨개명, 명목상 내선일체, 강제징용-징병, 종군위안부

-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1915~)

- 나치 4대 차별 (1933~1945)

노약자-심신장애인 안락사: T-4 프로그램

유대인: Holocaust

신티-로마 집시족: Porajmos

동성애자 박해

# 유엔과 반차별 원칙의 국제화(1)

<국제연합(유엔) 헌장> 1945.6.26 => 10.24

-전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항: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

3항: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

# 유엔과 반차별 원칙의 국제화(2)

<세계인권선언> 1948.12.10

-전문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한 권리** 및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미래 인권발전 방향 시사

# 헌법 상 평등 원칙

## <대한민국 제헌 헌법> 1948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현행 헌법> 1987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조항

-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 한국인의 차별 관련 의식 조사(2011)

-학력 및 학벌 (29.6%)

-동성애 (16)

-외모 (11.7)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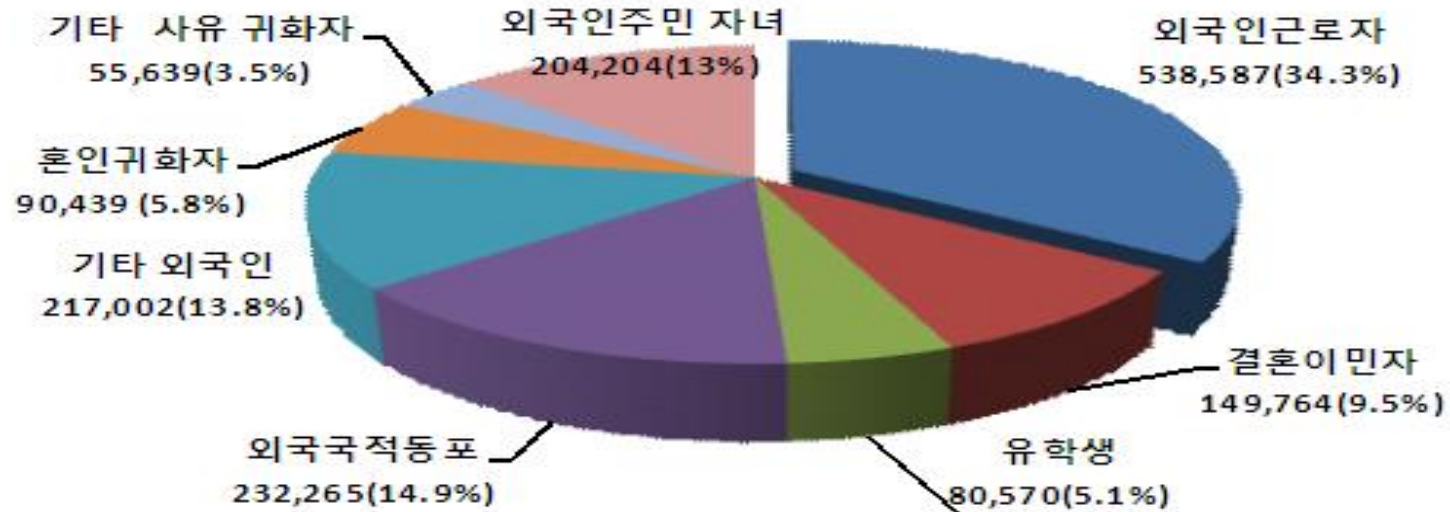
-출신국

-미(비)혼모

-인종, 피부색

# 외국인 주민 현황

156만 9,470명,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1%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1.1기준)

# 통계로 보는 국내 젠더 평등 현황(1)

## [ 교육 ]

- 2013년 여학생 대학 진학율 74.5% 남학생 67.4%

## [ 고용 ]

-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0.2%, 남성 73.2%
- 2013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1% (남녀 간 임금격차 OECD 1위)
- 2013년 10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율 61.5% (남성 73.6%)
- 2013년 상용근로자 중 여성비율 36.4%
-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구성비는 53.5%

# 통계로 보는 국내 젠더 평등 현황(2)

## [ 의사결정 ]

-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여성 47명(15.7%)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4.1%
- 여성관리자 46천명, 남성관리자 358천명
- 2009년~2014년 임용된 경력법관 134명 중 여성 법관 25명(18.7%)

## [ 복지 ]

- 여성가구주 빈곤율 17.5%, 남성가구주 빈곤율 6.2%

## [ 가족분야 ]

- 취업자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1일 여성 2시간 34분, 남성 36분 (2009년)
- 육아휴직사용자 여성 67,323명, 남성 2,293명(2013년 여성대비 남성비율 3.4%)

# 성적지향

- 범죄화: 종교적 죄 → 범죄 (Sodomy Law, 한국 군 형법)
- 병리화: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
- 미국정신의학회: 1973년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삭제
- 세계보건기구의 질병분류기준에서도 동성애 삭제
- 성소수자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범죄화, 병리화로부터 정체성으로 인정

# 장애

- 장애는 다양하다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요루/장루,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
  - 정신질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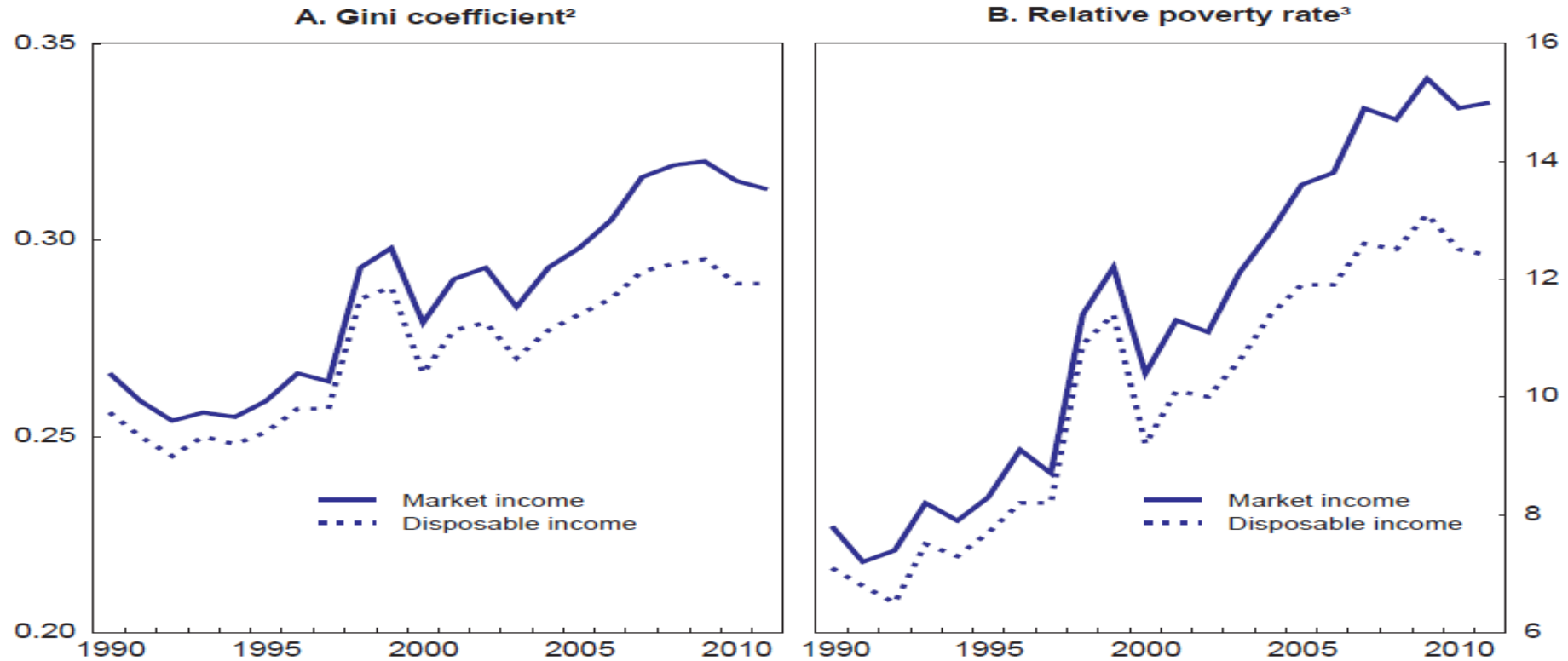
- 장애의 개념: 손상+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는 사회적 문제

# 장애인 실태(2014년)

- 장애인구수 273만명, 출현률 5.59%
- 사고,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 88.9%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 43.3%
- 조사대상 장애인 77.2%: 만성질환
- 장애인가구 67%, 저소득 가구로 인식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223만5000원
-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 36.6%
- 교육실태 (2011년): 무학 11.8%, 초등학교 32.9%, 중학교 18.3%, 고등학교 25.0%, 대학 이상 12.0%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추세



1. For urban households with at least two persons.
  2. The Gini coefficient can range from 0 (perfect equality) to 1 (perfect inequality).
  3. Relative poverty is defined as the share of the population that lives on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income.
- Source: Statistic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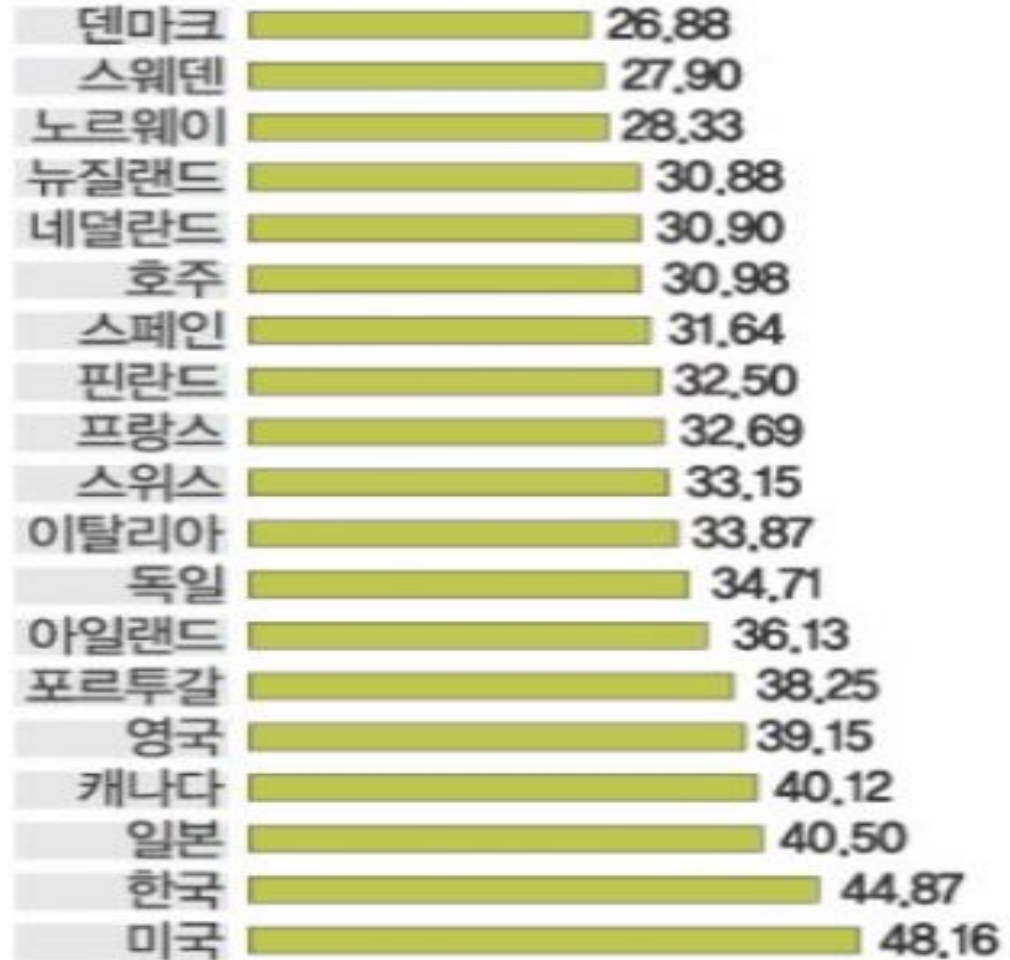
## 상위 1% 소득점유율 국제 비교

상위 1% 소득점유율 (단위: %)



\*파리경제대학 DB에 등록된 OECD 가입국 기준, 한국은 19개국 중 3위  
 (자료: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

상위 10% 소득점유율 (단위: %)



\*한국은 19개국 중 2위

# 국제인권법에서 금하는 차별의 유형

# 직접차별

- 일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대상자를 타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구별, 배척, 또는 제한).

# 간접차별

- 외관 상 중립적 기준 적용 (의도된 명시적 차별 목적이 있는지 여부 무관), 하지만, 차별금지사유와 연관해 특정 집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효과 초래한 경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호
- 국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에 포함

# 괴롭힘

- 일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대상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 그 중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성적 괴롭힘 혹은 성희롱

괴롭힘 → 차별의 한 유형

# 차별 조장 표현(Hate Speech)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 차별의 판단

- 대우나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

입증 부담: 차별 발생을 주장하는 쪽

- 외관 상 중립적인 조치의 불균등한 효과 초래하는 간접차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직접차별 혹은 간접차별의 가능성 확인

- 구별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존재 여부 심사

입증 부담: 구별을 행한 쪽

1) 정당한 목적 추구 2) 목적 실현 위한 다른 대안의 유무 등

\* 일반적으로 행정적 편의, 오랜 전통, 한 사회의 통념 등은 단독으로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차별과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 차별의 근거

-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별 아니다
- 구분 목적과 방법 사이에 비례관계 성립해야
- 적극적 차별시정책(평등실현조치): 차별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